

# 늘푸른 물결

통권 278

환경을 생각하는  
첫번째 실천, 환경운동연합  
회원을 권해 주세요

11 2022



## 깨끗한 바다, 내가 바라던 바다

지난 10월 22일 석문방조제 해안가에서 제 4차 해변환경정화 활동을 시민들과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올해 마지막 정화활동으로 그동안 함께 해주신 회원들과 시민들께 감사드립니다. 내년에 또 만나요~



당진환경운동연합, 시민과 함께하는 해변 환경 정화활동



외지에서 잇달아 당진 방문해 환경교육 진행



“지구를 지키는 일 저희가 함께 할게요!”

- ▶ 발행 일 2022. 11. 10.
- ▶ 발행 인 손창원, 송영주, 황성렬
- ▶ 편집 인 최오상
- ▶ 편집위원 팽말숙, 김정진, 이동준, 유형민  
임아연, 박은정, 조순형
- ▶ 당진시 무수동옛길32 태영빌딩 204호
- ▶ 전 화/ 355-7661
- ▶ 전 송/ 355-0443
- ▶ E-mail/ dangjin@kfem.or.kr
- ▶ http://dj.ekfem.or.kr

- 3 추모의 글
- 4 지역환경초점1  
| 당진환경운동연합, 시민과 함께하는 해변 환경 정화활동
- 5 지역환경초점2  
| 해나루보호작업장에서 찾아가는 환경교육 진행
- 6 지역환경초점3  
| 당진환경운동연합 “물 접촉 슬래그 재활용 기준 강화해야”
- 8 지역환경초점4  
| ‘전력 부족’ 압초.YK스틸, 임시 수전선로 설치 계획
- 9 지역환경초점5  
| 외지에서 잇달아 당진 방문해 환경교육 진행
- 10 지역환경초점6  
| 에코생협 당진점 나눔장터 열려
- 11 지역환경초점7  
| “지구를 지키는 일 저희가 함께 할게요!”
- 12 지역환경단신1  
| 충남시민단체 “김태흠 도지사, 생존 위기 도민 삶 챙겨라”
- 13 지역환경단신2  
| 노동자 빼고 진행된 정의로운 전환 토론회
- 14 전국환경초점1  
| 위험천만 우려에도 내년말까지 '기다리라'는 환경부...왜?
- 16 전국환경초점2  
| 1회용품 규제 포기, 환경부는 존재를 스스로 부정했다
- 17 전국환경초점3  
| “탈석탄법 제정 요구 5만명, 이제는 국회가 응답할 때”
- 18 전국환경초점4  
| 원전 폐기물, 서울시·경기도가 책임져야
- 19 10월 살림살이
- 20 10월 활동소식
- 22 11월 주요사업 계획
- 23 환경을 사랑하는 사람들
- 24 광고



이대원 참사 희생자분들과  
유가족 분들께  
깊은 위로와 애도의 뜻을 전합니다.



## 당진환경운동연합, 시민과 함께하는 해변 환경 정화활동



깨끗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 관광객들이 버리고 간 음료수병, 각종 쓰레기와 함께 돌 사이에 버려져 있는스티로폼 부표, 그물, 밧줄 등 폐어구 등을 수거하고 있는 참가자들



석문방조제에 버려져 있는 스티로폼 부표를 수거하고 있는 당진환경운동연합 김정진 사무국장

당진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 손창원 송영주 황성렬)이 22일 석문방조제에서 시민들과 함께 해변 환경 정화활동을 진행했다.

‘깨끗한 바다, 우리가 바라는 바다’라는 이름으로 5월과 6월, 9월에 이어 네 번째로 진행된 이날 환경 정화 활동에는 학생과 시민 등 23명이 참여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오전 9시 당진문예의 전당에서 버스로 출발해 석문방조제에 도착, 약 3시간 정도 환경정화 활동을 펼쳤다.

이날 참여자들은 깨끗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 관광객들이 버리고 간 음료수병, 각종 쓰레기와 함께 돌 사이에 버려져 있는 스티로폼 부표, 그물, 밧줄 등 폐어구 등을 수거했다.

환경 정화활동에 아이와 함께 참여한 정한나(35, 읍내동) 씨는 “아이에게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말라고 이야기만 하는 것보다 직접 체험을 통해서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싶어 참여했다”면서 “생각했던 것보다 해변에 쓰레기가 많아서 놀랐지만, 활동 후 깨끗해진 해변을 보니 뿌듯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당진환경운동연합 김정진 사무국장은 “4번의 환경 정화활동을 통해 해양 쓰레기 문제의 심각성을 느꼈다. 특히 폐어구 처리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면서 “해양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플라스틱을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 어구를 개발하고, 해양정책 담당 부서에서 관리수거 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당진신문]

## 해나루보호작업장에서 찾아가는 환경교육 진행



지난 10월 21일 생물다양성편으로 김정진 사무국장이 교육을 진행했다.

당진환경운동연합이 10월에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인 해나루보호작업장을 방문해 찾아가는 환경교육을 진행했다.

해나루보호작업장 찾아가는 환경교육은 금요일인 10월 14일과 21일 2회에 걸쳐 오전 10시부터 11시 30분까지 진행됐다.

‘내가 편하면 지구는 힘들어요’라는 이름으로 진행된 14일 첫 번째 환경교육은 박은정 사무차장이 강사로 나서 자원순환의 필요성에 대한 강의와 동영상 시청, 재활용 쓰레기 분리배출 체험이 진행됐다.

‘지구는 모든 동식물이 함께 사는 곳이에요’라는 이름으로 진행된 21일 두 번째 환경교육은 김정진 사무국장이 강사로 나서 생물다양성과 생태계 보



지난 10월 14일 자원순환편으로 박은정 사무차장이 교육을 진행했다.

전에 대한 내용으로 강의를 진행하고 플라스틱을 대체할 ‘나만의 휴대폰 거치대 만들기’ 체험이 진행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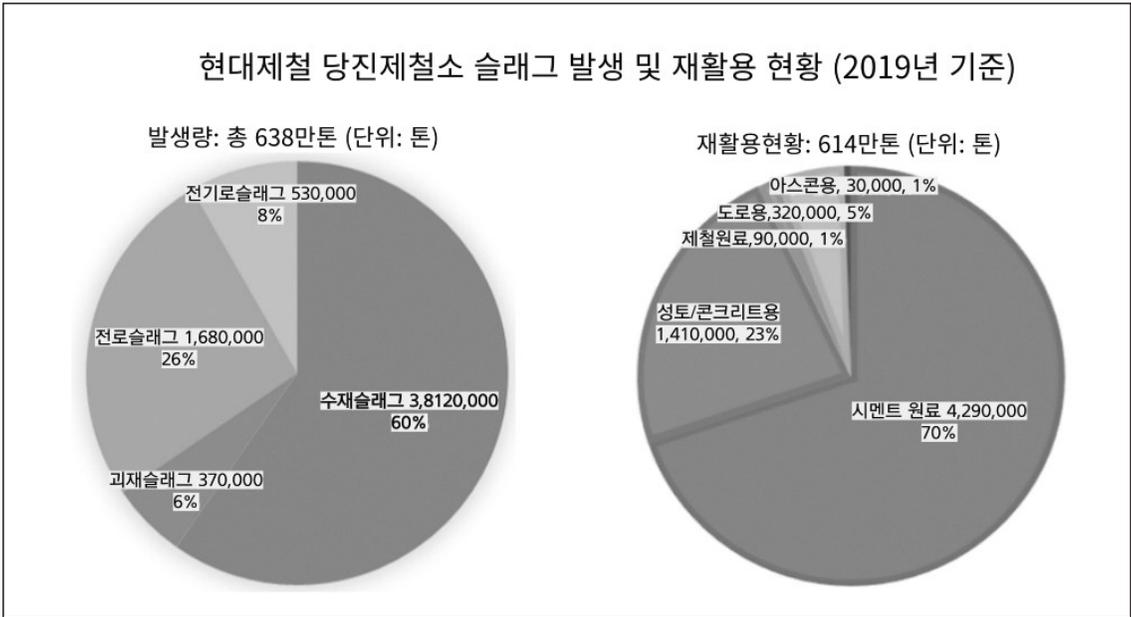
정미면 덕삼리에 위치한 해나루보호작업장은 2013년 개소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로 원두커피를 생산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생산시설이다.

[글:사무국]



# 당진환경운동연합 “물 접촉 슬래그 재활용 기준 강화해야”

물 접촉시에는 사용 기준 강화, 다른 분야 의무사용 확대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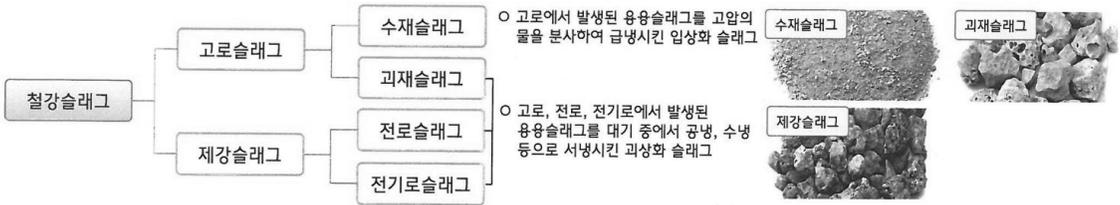
철광석에서 쇳물을 생산하고 남은 부산물인 제철 슬래그와 관련해 당진환경운동연합이 “물과 접촉해 주변 수생태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분야의 사용 기준은 강화하고, 다른 분야에는 의무사용을 확대해 환경보전과 함께 재활용이 위축되지 않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기했다.

당진환경운동연합은 지난 13일 보도자료를 내고 “현대제철 슬라브 야적장에 성토재로 사용된 슬래그에서 강알칼리성 유출수가 주변 농경지와 석문호에 흘러들어가 환경피해가 발생했다”며 “철저한 관리 대책과 함께 미비한 관련 법규의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제철소 부산물인 슬래그 중에서도 제강공정에서 배출되는 제강슬래그의 경우 미반응 유리 석회(Free CaO)의 함량이 높아 물과 접촉할 경우 수소이온농도(pH)가 높아져 주변 수생태계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현대제철에 따르면 이번에 문제가 제기된 송산면 가곡리 슬라브 야적장 구성에 성토재로 사용된 슬래그의 80% 정도가 제강슬래그였다.

제강슬래그에 의한 피해 사례는 2016년 전남 광양, 2019년 경남 거제, 2021년 전남 여수, 2021년 전북 새만금 등에서 여러 차례 발생해 사회문제가 되기도 했다. 이처럼 제강슬래그로 인한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당진시 산업단지

철강슬래그 분류



민간환경감시센터(이하 산단환경감시센터)는 지난 11일 홈페이지에 공개한 ‘현대제철 슬래그 성토재 조사보고서’를 통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현재의 재활용 기준을 새롭게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현대제철의 경우 슬라브 야적장 구성에 성토재로 사용된 슬래그에 대해 환경표지 인증을 받았으나 현행 인증기준의 용출시험에는 9개 중금속만 해당할 뿐 수소이온 농도(pH)는 기준에 포함돼 있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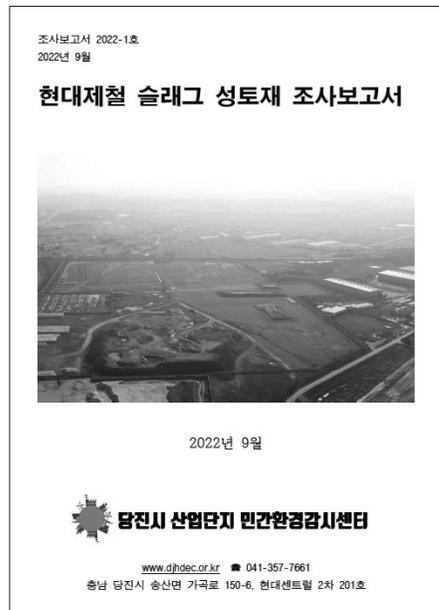
따라서 산단환경감시센터는 보고서에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한 ‘철강슬래그 및 석탄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 지침’을 개정해, 물과 접촉해 인근 수생태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용도에는 유해물질 용출기준에 수소이온농도(pH)를 추가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물과 접촉해 주변 수생태계에 영향을 주지 않는 분야에 대해서는 제강슬래그를 순환 골재의 사례처럼 건설공사에 의무 사용토록 해 재활용률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만약 제강슬래그의 사용 기준만 강화해 슬래그 재활용이 위축될 경우 재고가 쌓여 공유수면이나 산업폐기물 매립장에 매립해야 할 수도 있기 때

문이다.

당진환경운동연합 김정진 사무국장은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해서는 폐기물이 안전하다는 확신을 줘야 한다”며 “물과 접촉해 주변 수생태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분야는 기준을 강화하는 대신 재활용이 위축되지 않도록 다른 분야 사용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 당진시대]



당진시 산업단지 민간환경감시센터가 발표한 ‘현대제철 슬래그 성토재 조사보고서’ 표지

## ‘전력 부족’ 암초..YK스틸, 임시 수전선로 설치 계획

YK스틸, 송전선로 설치관련 입주기업 및 주민설명회 개최  
주민들, 한전의 ‘꼼수’ 우려. “계약서에 명확히 표기해야”

전력부족이라는 암초를 만난 YK스틸이 총 15.3km 구간의 임시 수전선로 설치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주민들은 이 계획이 한전의 송전선로 지중화 약속에 대한 꼼수가 아닌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YK스틸은 6일 당진시 송산면 동곡리 마을회관에서 송전선로 설치와 관련해 입주기업 및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다. (중략)

YK스틸은 신송산 변전소의 전력을 사용하기 위해 신송산 변전소(A)에서 RE100산단예정지(B)까지 약 6.3km 구간과 B구간부터 석문국가산단(C)까지 약 7.5km구간, C부터 와이케이스틸(D)까지 약 1.5km 구간 등 총 15.3km 구간에 임시로 수전선로 설치 계획을 세웠다. (중략)

설명회 자료에 따르면, 당초에 당진화력발전소에서 대산변전소의 주전력 공급선을 태안화력발전소로 변경하고 남은 여유 전력을 석문 변전소를 통해 YK스틸에 공급하려고 했다.

그러나 태안화력발전소의 철탑 공사 민원으로 인해 공사 기간 내에 기존의 수전선로 사용이 불가능해졌고, 한국전력공사는 YK스틸이 기존에 계획한 석문 변전소 5km 경로를 변경해 신송산 변전소까지 15.3km 수전선로를 임시로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YK스틸 당진공장 건설지원 황소연 총괄 매니저는 “신송산 변전소(A)와 RE100산단 예정

지(B) 구간에 임시로 설치 예정인 154kV 수전선로는 철탑이 아닌 고대면 환영철강 앞에 있는 관형주 형태로 세울 계획”이며 “A-B구간은 추후 당진화력부터 신송산 변전소까지 건설되는 354kV 송전선로가 완공되면 철거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신송산 변전소부터 동곡리까지 일부 구간은 지중화할 예정으로 산단 입주 신청과 관련하여 충청남도예 조치 계획을 제출한 상태”라고 변경된 사안을 공유했다.

그러나 YK스틸이 계획한 임시 수전선로 설치계획을 들은 주민들은 고압 전력의 피해상황과 A-B 구간의 철탑 철거예정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주민들과 투명하게 약속하고 상생할 수 있는 대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주변 기업들은 지중화를 명시한 문서 공유와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라고 강력하게 요구했다. (중략)

이와 관련하여 YK스틸 측은 “임시 설치되는 송전선로는 154kV을 기준으로 하기에 한전의 354kV 송전선로가 이 선로를 대신해서 사용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또한 A-B구간의 송전선로를 철거하지 않으면 비용이 발생하기에 계속 유지할 이유가 없다”며 주민들의 우려에 대해 답변했다. (이하 생략)

[출처 : 당진신문 일부 발췌]

## 외지에서 잇달아 당진 방문해 환경교육 진행

15일 서울대 교수 및 '기후위기와 인류' 수강 대학생 방문  
20일 환경재단 한·미 교류프로그램 미국 활동가 방문



지난 10월 15일 서울대학생들에게 현대제철 앞에서 유종준센터장이 설명하는 모습

토요일인 10월 15일 서울대학교 '기후위기와 인류' 수강 학생과 교수 등 22명이 기후위기와 환경 현안 지역 현장 답사를 위해 당진을 찾았다.

서울대 교수와 학생들은 이날 하루 종일 현대제철 당진공장, 당진에코파워, 당진화력발전소, 대산석유화학단지를 차례로 방문해 환경현안지역을 둘러봤으며 황성렬 공동의장과 김정진 사무국장, 당진시 산업단지 민간환경감시센터 유종준 센터장이 동참해 각 사업장별 현황과 문제점을 설명하고 참가자들의 질의에 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10월 20일 미국 활동가들에게 당진화력 석문각에서 김정진 사무국장이 설명하는 모습

20일에는 환경재단이 진행하는 한·미 교류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미국의 활동가 등 14명이 당진을 찾아와 현장을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다.

20일 현장 방문 환경교육은 탈석탄 에너지 전환의 현장인 당진에코파워 방문에 이어 당진화력발전소 버스 견학에 이어 석문각에서 당진화력 현황과 문제점을 설명했으며 김정진 사무국장과 당진발전본부 민간환경감시센터 김병빈 센터장이 동참해 당진의 탈석탄운동 경험, 석탄화력 현황과 문제점 등에 대해 설명하고 질문에 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글 : 사무국]

## 에코생협 당진점 나눔장터 열려

수익금 전액 어려운 청소년에게 후원 예정



지난 10월 21일 에코생협 당진점 매장 앞에서 나눔장터를 열었다.



나눔장터에서 판매할 반찬을 만드는 모습

에코생협 당진점이 지난 10월 21일 매장 앞 주차장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나눔장터를 열었다. 이날 나눔장터에서는 한 달 전부터 기증받은 옷, 가방, 신발, 생활용품, 장난감 등을 판매하고 곶절이, 무생채, 멸치볶음, 잡채, 시래기볶음 등 반찬도 만들어 함께 판매했다.

임수진 조합원은 “해마다 생협 나눔장터가 열리면 꼭 찾게 되고. 겨울철 옷이나 딸아이 옷을 싸게 살 수 있어서 좋구요. 또 제가 보던 수익금이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된다고 하니 더욱 뜻깊은 행사에 참여한 것 같아 기분도 좋네요.”라고 이날 나눔장터에 참여한 소감을 밝혔다.

에코생협 당진점은 매년 10월에 나눔장터를 열어 해마다 기증받은 물품의 판매 수익금과 조합원들이 직접 지은 농산물로 반찬을 만들어 판매한 수익금을 더해 당진의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후원물품을 전달한다. 올해도 100여 만원의 수익금이 모여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생필품을 전달할 예정이다.

[글: 사무국]

## “지구를 지키는 일 저희가 함께 할게요!”

탐동초 학생들이 폐건전지 모아 바꾼 종량제 봉투 기증  
당진환경운동연합, 학생들에게 후원증서 전달



탐동초등학교 '에코몬'동아리 학생들이 직접 만든 폐건전지 수거함 앞에서 찍은 모습



10월 28일 당진환경운동연합 사무실에서 학생들과 함께 후원증서 전달식을 하는 모습

탐동초등학교 환경동아리 학생들이 폐건전지를 모아 당진시청에서 교환한 종량제 봉투를 당진환경운동연합에 기증했다.

20여명의 탐동초등학교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는 환경동아리 '에코몬'이 지난 한달 동안 폐건전지를 모아 당진시청에서 쓰레기봉투로 교환해 10월 28일 당진환경운동연합 사무실에서 전달식을 가지고 기증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선생님과 학생 두명이 함께했다.

탐동초 남보dana 선생은 “폐건전지 모으기에 동참해달라는 공문을 받고 동아리 학생들과 모으기를 했는데 반응이 너무 좋았다”며, “종량제 봉투를 학교에서 쓸 수도 있지만 학생들이 좋은 곳에 후원하고 싶다고 해 기증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에코몬'동아리에 참여하고 있는 김나운 학생

(6학년)은 “평소 SNS나 유튜브에서 환경이 나 빠지고 있는걸 보고 심각하게 생각하고 관심도 있었는데 이번 활동을 통해 참여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라고 소감을 밝혔다. 함께 방문한 노아린 학생(6학년)은 “저도 지구의 환경을 지키는 일에 함께 해서 좋았고, 앞으로 중학교에 올라가서도 꾸준히 환경을 위한 봉사활동을 할 계획이에요.”라고 포부를 밝혔다.

이날 당진환경운동연합은 학생들에게 후원증서를 전달하고 내년에는 탐동초 학생들과 당진환경운동연합이 함께 폐건전지 뿐만 아니라 아이스팩, 우유팩 등 재활용품 모으기 활동을 넓혀 학생들에게 재활용품 분리배출의 중요성을 알리고 지구 환경을 생각하는 활동을 확대해 펼쳐지는 데 뜻을 모았다. [글: 사무국]

## 충남시민단체 “김태흠 도지사, 생존 위기 도민 삶 챙겨라”



지난 10월 7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도정 100일 노동·농민·시민사회 기자회견'에서 김정진 사무국장이 발언하는 모습

충남 노동·농민·시민단체가 “충남도는 농업·환경·인권 문제에 적극 나서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기후위기충남행동·민주노총세종충남본부·전농충남도연맹·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은 7일 오후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도정 100일 노동·농민·시민사회 기자회견’을 열어 “코로나 19로 많은 이들이 생활고를 겪는 가운데 물가 폭등과 급격한 금리 인상이 닥쳐 서민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은 더욱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 단체는 △김태흠 지사와 충남도는 쌀값 보장과 생산비 폭등에 대한 지방정부 차원의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인권조례 폐지에 대한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며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이진구 전농충남도연맹 의장은 “김 지사는 취임 100일을 맞아 ‘충남이 권역·산업 분야별로 역동적으로 변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농민은 생존 위기를 맞고 있다”며 “농자재값은 평균 30% 올랐으나 쌀값은 80kg 한 가마니가 20만원에서 15만원으로 폭락했다. 지원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정진 기후위기충남행동 운영위원은 “김 지사는 지난 6일 탄소중립 경제특별도를 선포했다. 기존 충남의 주력산업이 모두 전환 대상”이라며 “충남에서 석탄화력발전소가 폐쇄되면 7600명이 일자리를 잃는데 도민과 노동자 대책은 없다. 도민과 노동자에게 산업 전환은 생존 위기”라고 주장했다.

장명진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상임공동대표는 “노동안전 강화를 위한 예산과 비정규직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예산이 삭감될 것”이라고 한다. 충남인권기본조례, 충남학생인권조례도 폐지 조례안과 서명이 진행되면서 위기를 맞고 있으나 충남도는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김 지사는 이른 시일 안에 농민·인권·환경단체·노동계와 만나 우리의 요구와 제안을 도정에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한겨레]

# 노동자 빼고 진행된 정의로운 전환 토론회

24일 당진에서 정의로운 에너지전환 토론회 열려



지난 10월 24일 당진종합운동장 프레이닝센터 앞에서 당진환경운동연합 회원들과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와 발전비정규직연대가 토론장 앞에서 규탄 캠페인을 열었다.



같은날 트레이닝센터에서 노동자를 빼고 진행된 정의로운 에너지전환 토론회를 열었다.

충남도가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대비하기 위해 진행하고 있는 정의로운 전환 토론회가 정작 핵심 당사자인 노동자를 빼고 진행해 발전소 노동자들이 충남도의 일방적 추진을 규탄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충남도가 주최하는 제1차 정의로운 에너지전환 토론회가 10월 24일 당진종합운동장 트레이닝센터에서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충남도가 석탄화력발전소 소재 지역을 순회하며 개최하는 사회적대화의 일환으로 첫 번째 정의로운 에너지전환 토론회였다.

문제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쇄로 인해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발전소 노동자들이 토론회 참가 대상에서 아예 빠져있었다는 점이다. 이에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와 발전비정규직연대회의가 토론장 입구에서 노동자를 빼고 일방적으로 정의로운 전환 토론회를 진행하는 충남도를

규탄하는 항의 캠페인을 진행했다.

발전소 노동자들은 이날 규탄 캠페인에서 충남의 석탄화력발전소가 폐쇄될 경우 8천명에 가까운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사라진다고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노동자를 제외하고 정의로운 전환 토론회를 진행하는 충남도의 독선·불통 행정을 규탄했다.

이날 토론회는 기후사회연구소 한빛나라 소장의 발제에 이어 소그룹별 토론이 진행됐다. 발제 이후 질의응답에서 발제 내용이 지역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 정의로운 전환 사회적 대화가 일회성 토론회로 변경된 것, 노동자들이 토론회에서 빠져있는 것 등이 문제로 지적됐다. 소그룹별 토론에서는 발전소 폐쇄시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인지, 그 영향에 대비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의견을 모아 정리했다.

[글 : 사무국]

## 위험천만 우려에도 내년말까지 '기다리라'는 환경부...왜?

'낙동강 공기 중 유해 남세균 독소, 미국보다 최대 500배 높게 검출'  
 '뇌 질환 유발하는 BMAA, 발암물질이자 간·생식 독성 지닌 마이크로시스틴 검출'  
 환경부 "조류독성 에어로졸 인체 영향 연구 용역 내년 12월까지"  
 환경부, "몇몇 사례 검토했으나, 인체 영향 크지 않을 것으로 검토됨"  
 환경단체 "유해 남세균이 코 안에서 사멸 않고 계속 독소 생성해 치명적일 수도"



8월 4일 낙동강네트워크와 대한하천학회, 환경운동연합 등이 함께한 낙동강 녹조 오염 현장 조사 모습.

(중략) 낙동강 등 남세균(cyanobacteria) 독소에 대한 국민건강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정부는 안일한 대처로 환경단체들의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최근 환경단체와 전문가들이 낙동강 남세균 독소 위험에 대한 조사 결과와 국민건강 위해 우려를 알리고 시급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면서 관련 성명과 기사는 쏟아지고 있다.

그러나 환경부는 '모니터링하고 있다', '불검출 되었다', '안전하다', '기다리라', '우리 기준이 맞다' 등의 답을 내놓으며 안일하게 대처하

고 있어 우려는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9월 21일 기자회견을 통해 환경단체와 관련 전문가 학술단체, 50여 명의 국회의원들이 낙동강 공기 중에 유해 남세균(녹조, 시아노박테리아) 독소인 마이크로시스틴이 2017년 미국 뉴햄프셔주 강에서 검출된 것보다 최대 500배 높다는 사실을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미세 먼지와 비슷한 크기의 유해 남세균이 공기 중 에어로졸(액체 미립질)로 확산한다는 사실이 국내

에서 처음으로 확인됐다. (중략)

### 계속되는 사례에도 환경부의 '인체 영향 크지 않다' 주장은?

기자회견이 있던 날 환경부는 "조류독소를 포함한 에어로졸이 인근 지역의 인체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전문가 연구 용역이 지난달 4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진행 중"이라고 설명자료를 통해 밝혔다.

그러면서 "에어로졸에 대한 해외 연구가 많지

는 않으며, 관련 몇몇 사례(뉴질랜드 Forshth 호수 조사와 미국 뉴햄프셔주 사례 등)에서 에어로졸 검출 및 바람에 따른 이동에 대해 검토 하였으나, 인체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검토 된다"라고 설명했다. (중략)

환경운동연합은 해외 연구 결과 유해 남세균 에어로졸이 콧속, 기도, 폐에서 발견됐으며, 유해 남세균이 코 안에 정착하면 바로 사멸하지 않고 계속 독소를 생성해 치명적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고 했다.

미국과 호주 등에서 이미 유해 남세균에 따른 급성 독성이 실증적으로 검증됐고, 미국의 경우 녹조 면적 1% 증가 시 비알콜성 간질환 사망자가 0.3%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와 국내에서는 4대강 사업 이후 녹조와 비알콜성 간질환 사망자 비율 관련 통계적 연관성 연구도 나왔다. (중략)

## 윤석열 정부의 환경부, 이명박 정부의 4대강 보 유지 운영?

현재 환경부 장관은 (중략) 4대강 보와 관련해 "4대강 보는 물 이용 여건, 수질 등을 종합 고려했던 최적 운영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금강, 영산강은 진행 중인 감사원 공익 감사 결과를 반영하겠다"라고 보고했다.

윤석열 정부의 감사원은 일부 보를 해체하기로 한 문제인 정부의 결정을 감사하고 있으며, 보 해체가 아니라 유지 운영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

전문가들은 보가 물을 가두어 흐르지 못하게 하면 녹조가 번성하기 때문에 보를 그대로 두면 녹조 대란은 피할 수 없다고 말한다. (중략)

박근혜 정부 시절 환경부는 녹조 독소가 농작물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을 것이라고 단정

했지만 지난해 낙동강과 금강의 농산물에서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됐다. 게다가 지난 7월 대구 MBC에 따르면 대구시 수돗물에서 0.28-0.22ppb의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된 바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는 모든 사람들에게 0.03ppb 이상의 물을 3개월 이상 마시지 말 것을 권하고 있다.)

## 4대강 사업의 진실과 녹조 독소 위험 정보는 폐하려 하나.

지난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소속기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비례)은 "국립환경과학원이 환경부와 함께 녹조 독소 위험 정보를 은폐하고 왜곡해 국민 안전을 방치했다"며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에 수돗물 독소 조사에 나서지 말라고 환경부가 압박했다"라고 비판했다.

또한 "환경부의 해명과 달리, 미국 EPA의 모니터링 규정에 따르면 ELISA 방식을 통해 측정 한 0.3ppb 미만의 값도 '안전한 음용수 검증 시스템'을 통해 EPA에 보고돼 관리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최근 경찰이 녹조 성분 분석을 맡은 이승준 국립부경대 교수와 환경운동연합 등 활동가에게 전화를 걸어 "상부 지시로 녹조 문제를 과악하려 한다. 환경부와 환경단체의 입장 차와 집회 계획 등이 어떻게 되느냐" 등을 묻고 확인하려고 했다고 전해졌다.

관련 단체들은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의 추악한 진실을 은폐하려 경찰과 국가정보원을 동원했던 것이 연상되며, 윤석열 정부 경찰의 행태가 권위주의 시대의 발상이자 명백한 인권 탄압"이라고 강하게 규탄했다.

[출처:케미컬뉴스 일부 발췌]

## [성명]

## 1회용품 규제 포기, 환경부는 존재를 스스로 부정했다



오늘(11/1), 환경부는 '11월 24일부터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시행'이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달 24일부터 적용되는 1회용품 사용 규제를 포기하고 시장의 자발적 감량과 규제의 책임을 지자체에게 떠넘긴다는 것이다. 이는 사실상 '1회용품 규제'를 포기한 것이다. 환경부는 본연의 역할을 저버린 것에 머물지 않고 행정부의 존재까지 스스로 부정하고 있다.

해당 1회용품 규제 내용은 이미 지난해 말 자원재활용법 시행령이 개정(21.12.31)되었고, 시행일(22.11.24)까지 1년에 가까운 시간을 확보해 정책 이행 준비를 하도록 했다. 이미 시장 즉 해당 커피전문점이나 편의점 등은 이에 따른 준비가 진행되고 있었다. 그러나 규제 대신 계도라며 규제를 포기했다.

'참여형 계도', '자율감량' 등을 내세운 환경부는 정책 시행 주체로서의 역할을 포기했다. 시장에 맡긴 규제라는 이행의 책임이 없는 정책 방향을 제시했고, 규제의 역할을 '지자체 여건에 따라 실효적으로 집행하라'며 당당히 지자체에 책임을 전가했다. 환경정책 방향과 내용을 사업자와 지자체에 전달해 이행하도록 해야 함에도 지자체 마다 다른 환경정책을 집행하도록 해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사업장 상황으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금지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라며 제도를 이행하지 않아도 되도록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었다. 부득이한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 부득이한 경우를 누가 판단하고 누가 해석할 것인가. '실질적인 감량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세밀한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도 마찬가지다. 1회용품 사용금지라는 규제를 시행하면 실질적인 감량 성과를 확인할 수 있다. 사용 저감을 위해 어떤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인가.

불과 2주 전 정부는 9회 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전 주기 탈플라스틱 대책을 발표했다. 일회용품 사용 최소화와 더불어 플라스틱 국제협약에 대한 준비도 하겠다고 선언했다. 2025년까지 폐플라스틱 발생을 20% 감축하겠다고 첫번째로 해야하는 일이 1회용품 사용 규제다. 규제 없이 플라스틱 사용량과 폐플라스틱 발생량을 줄일 수 없다. 말잔치 뿐인 환경부의 정책, 신뢰를 잃은 환경부. 국민들은 더 이상 기대할 환경정책이 없다.

2022년 11월 1일  
한국환경회의

# “탈석탄법 제정 요구 5만명, 이제는 국회가 응답할 때”

각 정당에 탈석탄법 제정 당론 표명 및 입법 논의 착수 촉구



10월 6일 국회 정문 앞에서 개최된 ‘국회는 응답하라’ 기자회견 모습

기후위기 가속화를 막기 위해 신규 석탄화력 발전소 건설을 중단해야 한다는 시민사회의 요구가 국회까지 닿았다. 6일 오전 기후, 청년, 노동, 종교 등 다양한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인 ‘탈석탄법 제정을 위한 시민사회연대’는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해 국민동의청원을 거쳐 국회에 회부된 ‘탈석탄법’ 제정을 위한 논의를 시급히 시작하라고 국회에 촉구했다.

시민사회연대는 앞서 국회 국민동의청원 누리집에 ‘신규 석탄발전소 철회를 위한 탈석탄법 제정에 관한 청원’을 냈다. 지난달 24일 3만 5000명이 모인 ‘924 기후정의행진’ 이후 청원 참여 인원은 빠르게 늘어, 29일 정족수인 5만 명 동의를 얻었다. 이에 탈석탄법 제정 청원은 국회 소관위원회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위원회에 30일 회부됐다.

기자회견에서 (중략) 이들은 “이번 청원 달성

은 신규석탄발전 철회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는 사실에 대한 전 국민적 동의”임을 보여준다고 “더 이상 정부와 국회가 사태를 수수방관해서는 안 된다는 시민들의 경고”를 깨달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략)

국제사회와 과학계는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1.5℃ 이내로 막겠다는 목표 달성을 위해서라도 한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이 석탄발전을 늦어도 2030년까지 폐지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강원도 삼척과 강릉에는 포스코, 삼성물산과 같은 민간기업이 추진 중인 4기의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이 진행 중이다. (중략)

2019년 국회는 ‘기후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지난해 8월 ‘탄소중립 기본법’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기후위기 대응의 핵심 과제인 탈석탄을 위한 실질적 제도 변화는 이어지지 않았었다. 국회와 정부가 그동안 구호로만 기후위기 대응을 외쳐왔다는 비판을 받는 이유다. 시민사회연대는 여아가 탈석탄법 제정을 당론으로 정하고 조속히 입법 논의를 시작해 석탄발전 건설 철회를 위한 법제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

# 원전 폐기물, 서울시·경기도가 책임져야

낮은 전력 자급률을 원전 지역주민들의 희생으로 채워



10월 6일 국회 정문 앞에서 개최된 '국회는 응답하라' 기자회견 모습

원전 소재 지역 대책위와 전국의 탈핵 운동 단체들은 24일(월) 서울시청 앞에서 서울시와 경기도에게 고준위핵폐기물 책임을 촉구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원전과 방사능폐기물의 책임에도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으며 오히려 전기를 많이 쓰는 대도시가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기 소비 1위, 3위인 경기도와 서울시에 원전폐기물의 책임을 물었다.

먼저 박상현 탈핵부산시민연대 활동가는 “서울의 전력 자립률이 11%이다. 나머지 89%는 위험한 원전 근처에 살아가는 지역 주민들의 몫이 포함돼 있다. 정의롭지도 안전하지도 않은 원전 인근 지역 주민은 계속해서 불안을 갖고 살아간다. 핵폐기물에 대한 서울시장님과 경기도지사님의 책임 있는 답변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용석록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대외협력국장은 “울산은 반경 30km 내에 14개의 고리원전과 월성 원전까지 위치해 우리나라에서 가장 원자력발전소를 많이 끼고 있는 도시다. 원전 가동만으로도 안전의 위협을 받고 있다”며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건식 저장 시설은 곧 그 지역을 핵폐기장으로 만드는 것이다. 정부의 보수적이고 일방적인 기본계획은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사성폐기물의 책임에도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 오히려 전기를 많이 쓰는 대도시의 책임이 무겁다.

서울과 경기도가 핵폐기물을 책임지는 것에 대해, 수명연장을 비롯한 원전 확대에 방사성 폐기물이 뒤따르는 것에 대해 묻는 것은 원전을 확대하고, 전기를 소비하는 방식에 대한 질문으로부터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

원자력발전소 소재 지역 대책위와 전국의 탈핵 운동 단체들은 황보승희 의원이 제안한 ‘인구수에 비례해 사용후핵연료 다발을 나눠 보관하는 것’에 대한 서울시와 경기도의 입장을 묻는 질의서를 발송했다.

또한 향후 2주 간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에게 온라인 행동을 요구하는 캠페인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 환경일보]

(사)당진환경운동연합  
2022년 10월 일반회계 수입 지출 결산 보고

(단위 : 원)

수 입			지 출		
항	목	금액	항	목	금액
이월금	전월 이월금	30,765,507	인건비	급여	4,540,000
회 비	개인회비	5,720,000		퇴직적립금	365,820
	법인회비	1,378,000		사회보험료	466,310
	계	7,098,000		계	5,372,130
일반후원금	개인후원	814,480	경상비	복리후생비	-
	법인후원	2,000,000		세금과공과금	78,760
	계	2,814,480		소모품비	-
사업후원금	사업후원금			지급수수료	482,750
	계			기타운영비	151,900
단체지원금	단체지원금		계	713,410	
	계		사업비	기후에너지사업	20,000
보조금	기타사업			생태보전사업	1,680,000
	계			생화환경사업	-
지원금수입	지원금수입			조직 회원사업	959,100
	계			모금사업	5,240
기타수입	기타수입			연대사업	621,600
	계			기타사업	-
전입금	전입금			계	3,285,940
	계		자산취득 및 부채상환비	자산취득 및 부채상환	
차입금	차입금			계	
	계		이월액	이월액	31,306,507
		계		31,306,507	
월수입 총계		9,912,480	월지출 총계		9,371,480
수입 합계		40,677,987	지출 합계		40,677,987



## 당진환경운동연합 소모임 난리부르스 영상제작

지난 10월 3일 당진환경운동연합 소모임 난리부르스가 '나는 나비(윤도현 밴드)'를 '나는 지구'로 기후위기의 심각성과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고 지구를 살리자는 의미로 개사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이 영상은 당진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김태흠 도지사 도정 100일 충남 노동농민시민사회 기자회견

10월 7일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충남도는 농업·환경·인권 문제에 적극 나서라”며 충남의 노동·농민·시민사회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 환경운동연합 후원의밤 행사참가

10월 13일 환경운동연합 후원의밤 행사에 당진환경운동연합이 함께하였습니다.

## 당진시 수소산업 육성전략 포럼 참가

10월 19일 당진시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에너지센터와 호서대 주관으로 열린 '당진시 수소산업 육성전략 포럼'에 황성렬 의장이 토론자로 참가하였습니다.



##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홍종호 교수 강연회

10월 21일 내포혁신플랫폼에서 '기후위기와 탄소중립'이란 주제로 충남의 시민사회 단체 활동가들에게 강연회가 열렸습니다.



## 당진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단 회의

10월 25일 당진환경운동연합 사무실에서 공동의장단 회의를 열었습니다.



# 01

## 일반사업

- ❖ 11/01 당진시 탄소중립 기본계획 제안서 평가위 - 당진시청  
11월 정기운영위원회 회의 - 사무실
- ❖ 11/03~11/04 시민사회단체 전국 활동가 대회 - 공주 한국문화연수원
- ❖ 11/04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관련 간담회 - 당진에너지센터  
에코생협 당진점 생활재위원회 - 에코생협
- ❖ 11/05 당진시대 시민운동 좌담회 - 당진시대
- ❖ 11/07 지역에너지계획 시민공청회 - 당진시청
- ❖ 11/07~11/09 충남에너지전환 활동가 워크숍 - 신안, 영광, 군산
- ❖ 11/10 환경연합 전국사무국처장단 회의 - 온라인
- ❖ 11/12 에코생협 조합원 나들이 - 한탄강
- ❖ 11/14 정의로운 전환 조례 관련 간담회 - 내포혁신플랫폼
- ❖ 11/15 환경교육도시 추진위원회 회의 - 미정
- ❖ 11/16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 회의 - 내포혁신플랫폼
- ❖ 11/17 반인권·반농업·반노동 위기! 충남지키기 대책위 기자회견 - 도청  
충남환경운동연합 운영위원회 회의 - 서산태안환경연합
- ❖ 11/18~11/19 환경연합 자원순환 포럼 - 통영RCE
- ❖ 11/24 환경연합 '생태와 재생에너지 대화' 2차 공론장 - 온라인
- ❖ 11/28 제철산업 건강영향보고 동시 기자회견 - 당진시청
- ❖ 11/29 공동의장단 회의

# 02

## 회의 및 기타일정

- ❖ 사무국 회의 -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
- ❖ 회원소모임 난리부르스 - 매주 월요일 오후 7시30분, 최현준실용음악학원
- ❖ 소식지 편집위원회 - 11/29(화) 11시30분

# 03

## 지역현안

- ❖ 석문산단 불산공장 입주
- ❖ 석문산단 LNG기지 건설
- ❖ 현대제철 슬래그 오염수 유출
- ❖ 송산·석문 산업폐기물 처리시설
- ❖ 당진화력-신송산 간 345kV 송전선로
- ❖ 북당진-신탕정 간 345kV 송전선로

● 새내기 회원

한민국(서산시)

● 이달회비 납부 회원

가봉현 강남기 강남호 강도연 강병수 강은구 고락일 고영훈 고재만 고중민 곽성심 곽영복 구경숙 구미선 구분갑 구분재 구분찬 구분평 구분현 구승남 권석원 권영석 권중원 길호중 김경희 김경희 김광수 김광운 김광태 김권기 김기동 김길자 김남조 김남철 김남철 김달식 김대원 김동균 김동길 김동수 김동진 김동환 김명구 김명선 김명용 김명호 김미경 김미성 김민정 김민호 김백선 김병구 김병민 김보담 김본겸 김봉균 김봉운 김봉일 김석규 김석래 김선규 김성훈 김세진 김수정 김수진 김수창 김수한 김순동 김승수 김신순 김양중 김영민 김영삼 김영자 김영준 김예나 김용준 김용훈 김원용 김윤각 김윤태 김은주 김은주 김은호 김응열 김응영 김일권 김재성 김재영 김재진 김정곤 김정수 김정숙 김정순 김정진 김종균 김종래 김종범 김주석 김지환 김 진 김진남 김진용 김철환 김춘이 김필배 김하정 김향곤 김현기 김현림 김현웅 김형기 김형모 김혜선 김혜숙 김호인 김홍희 김홍환 나상흠 남청현 노정길 노정민 노창엽 류연석 류제민 맹봉재 명형남 문상수 문영미 문영수 문은호 문창모 박경미 박경서 박경언 박경일 박근성 박기남 박기술 박기행 박미상 박미현 박보균 박상길 박상준 박성규 박성민 박세진 박순래 박신규 박연신 박영일 박용상 박윤숙 박은자 박은정 박은희 박이리사 박인순 박정연 박종대 박종화 박창순 박춘희 박해규 박현순 박호완 박희경 박희복 박희정 방승미 방우진 배국희 배병호 백광현 백윤경 백종렬 서동우 서영순 서지현 성낙석 소병희 손강열 손민우 손영기 손영미 손준선 손창원 손화웅 송노섭 송병언 송수연 송연섭 송영주 송운호 송재한 송창병 송하중 송한결 신경상 신동균 신미희 신진호 신철성 신현기 신현덕 신현하 심주현 심중섭 안길훈 안동일 안병호 안승환 안영순 안영훈 안효권 안효신 양근호 양영진 엄기태 오동원 오복환 오의환 오추석 오현동 오훈순 우동기 원유영 유경자 유 성 유영석 유종준 유현경 유형민 육이창 윤기섭 윤기영 윤도현 윤범용 윤은경 윤인현 윤재무 윤정득 윤주홍 윤형순 윤혜신 이강선 이경미 이경용 이광선 이규달 이규철 이근주 이기중 이능용 이대우 이동준 이두용 이명자 이미영 이병구 이병도 이병천 이보은 이상록 이상문 이상용 이상우 이상일 이상현 이새봄 이석규 이선이 이수현 이순영 이승호 이영근 이영길 이영수 이영우 이용석 이원복 이원석 이은화 이인범 이인수 이일구 이일순 이장희 이재상 이재성 이재순 이재화 이재훈 이정환 이정훈 이종관 이종필 이준성 이준호 이증영 이진규 이창규 이철재 이충희 이해선 이해운 이현숙 이호경 이 훈 이홍숙 인만교 인현옥 인호환 임관택 임광빈 임미숙 임수진 임아연 임종광 임종석 장규진 장덕기 장미경 전경배 전중숙 전향숙 정경채 정광영 정낙구 정덕영 정분환 정봉식 정상수 정선희 정세훈 정영표 정의철 정종한 정중섭 정찬관 정치웅 조강호 조민형 조상연 조성대 조성준 조성환 조수용 조수현 조순형 조신형 조용재 조재형 조한영 주영권 지광선 차기능 차일병 차재석 차준국 채종국 천선휘 천혜경 최강부 최도현 최병수 최석현 최성욱 최세호 최연묵 최원이 최오상 최원택 최원근 최은진 최인호 최일규 최장열 최재혁 최종길 최종원 최지용 최창용 최혜인 최효진 팽말숙 하용자 하정미 하정이 한광현 한기홍 한미경 한상무 한상태 한성현 한수미 한수석 한영우 한원희 한청수 함효진 허인옥 현 민 호상기 홍기석 홍덕선 홍두표 황성렬 황영호 황푸름 (주)다올건설산업 (주)디에스 글로벌컨택 당진시대 당진여객(주) 별나라어린이집 보덕사 상록인쇄사 생고뱅이소바코리아(주) 세실리아요양센터 영축농장 위너교육이벤트 울곡어린이집 정우건설(주) 해송 환경운동연합에코생협

# 1회용컵 보증금제가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새명해주십시오!

2019년, 환경부는 '1회용품 함께 줄이기 계획'을 발표하며 1회용품 사용량을 35% 이상 줄이고 대체 가능한 1회용품은 쓰지 않는 것을 우선으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2022년 오늘, 환경부는 시의적절한 정책 시행과 불필요한 1회용품 사용 규제가 아닌 '1년 간의 계도'와 '자율 감량을 말하며 역행을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1회용컵 보증금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당진환경운동연합 회원님들의 많은 서명과 홍보 부탁드립니다.

## 1회용컵 보증금제 전면 시행 촉구 서명

환경운동연합

환경부가 1회용컵 보증금제 대상 지역을  
2곳으로 축소하여 시행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1회용컵보증금제 전면시행을 요구해주세요!

1회용컵 보증금제 전면 시행!



교차반납 시행!

전국 시행 로드맵 발표!

※서명 명단은 환경부에 전달합니다.

서명 기간 : 2022년 10월 5일 (수) ~ 11월 30일 (수)

문의 : 녹색연합 이지수 활동가(070-7438-8504, jisu4442@greenkorea.org)

환경운동연합 백나운 활동가(02-735-7069(304), bnayoon@kfem.or.kr)

후원계좌

농협 301-0301-3325-91 사단법인 당진환경운동연합

※이 소식지는 상록인쇄사의 도움을 받아 발행되었습니다.